

건설동향브리핑¹⁾ - 건설 정책 및 경영 동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 건설 정책 동향

◆ 2013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

- 총 17.3조원 배정, SOC 예산은 0.7조원 증액에 그쳐 -
건설동향브리핑 제408호(2013.4.22.) 박용석 연구위원

■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총 17.3조원의 추경안 마련

정부는 세출 확대, 일자리 확충, 민생 안정, 경제 회복을 위해 총 5.3조원(기금 포함시 7.3조원)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자리 확충 및 민생 안정에 3조원, 중소·수출 기업 지원에 1.3조원,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방 재정 지원에 3조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SOC 예산은 24.3조원에서 25조원으로 0.7조원 증액되었다. 서민·취약 계층의 주거 생활 개선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주택 구입·전세 자금 지원에 4,000억원(6.65조원 → 7.05조원)이, 보금자리론 확대를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출자한 0.1조원이 증액(0.1조원 → 0.2조원)되었다. 또한, 전세 임대 추가 공급(8,000호)으로 임대 주택 입주 대기가 최소화(1조원 → 1조 6,240억원)되었다.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 관련 투자 확대

2013년 추경 예산은 안전 투자 확충 및 시설 개·보수에

도 증점 지원을 해 중요 도로·철도·댐·항만 시설 개량 등의 안전 투자를 확대(1조 3,514억원 → 1조 5,957억원)하였다. 또한, 재해 위험 지역 정비 및 우수 저류 시설 설치 등 재해 예방 투자(6,812억원 → 8,312억원)와 하수처리장, 공단 폐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조기 완공(1조 5,417억원 → 1조 7,645억원)을 위한 예산도 증액하였다.

지역 산업 육성 및 농촌 지원을 위해서는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숙박 시설 신축 및 개·보수에 필요한 용자 지원을 확대(2,920억원 → 3,070억원)하였고, 국립 공원의 야영장·캠핑장 확충(120억원 → 150억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하였다.

상습 침수 농경지에 대해 배수장, 배수로, 배수문 등 방재 시설의 설치 지원 확대로 이상 기후에 안전한 영농 활동을 지원(2,700억원 → 3,000억원)하였고, 파손 및 노후화로 기능이 저하된 저수지 등의 개·보수, 농경지 진입로 확장 등 용·배수로 정비 지원을 강화(4,300억원 → 4,600억원)하였으며, 농어촌 지역 하수도 시설도 확충(1,008억원 → 1,364억원)하였다.

■ 경기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SOC 투자 확대 필요

이번 추경은 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목표로 마련되었으며,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분야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겠다. 이때, 건설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와 생산 유발 효과가 크고, 수입 유발 효과가 타 산업에 비해 작아 국내 경기 활성화의 수단으로 매우 적합하겠다.

1)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주간으로 발간하는 「건설동향브리핑」은 건설 경제·정책·경영 이슈와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회지 [CEM Info] 섹션에서는 「건설동향브리핑」 최신호 일부를 요약하며 게재하고자 합니다. 소개된 전문은 www.cerik.r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6대 국정 과제 실천 방안' 과 시사점

- 기존 건설산업의 창조 산업화 및 서민 주거 복지 강화 등 중점 추진 -

건설동향브리핑 제410호(2013.5.6.) 이승우 연구위원

■ 국토교통부, '6대 국정 과제 실천 방안' 발표, 건설산업 관련 주요 내용

① 지역 균형 발전 및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 관리 : 국민 체감형 지역 발전 정책 추진, 지역 성장 거점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환경과 조화된 국토 관리 체제로 전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② 좋은 일자리 만들기 : 건설·교통 등 기존 산업의 창조 산업화, 해외건설 1,000억 달러 시대 개막,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의 경쟁력 강화, 산업단지를 창조 기업의 인큐베이터로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③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 교통 사고의 획기적 감소, 도시 홍수 방지 기반 마련, 건설공사 및 시설물 안전 관리 강화, 국민 일상 생활 불편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④ 출·퇴근 교통난 완화 : 대중 교통 육성 및 수요 관리 정책 추진, 출·퇴근 교통망 확충, 항공 산업 지속 성장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⑤ 건설·물류 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대중소 기업 상생 발전 지원, 건설시장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건설기 능등급제, 건설 기능인 및 장비 업자 처우 개선, 공공공사 계약 제도 선진화 검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⑥ 보편적 주거 복지 실현 : 주택시장 정상화, 하우스 푸어 및 렌트 푸어 지원, 공서민 주거 복지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시사점

6대 국정 과제의 특징을 살펴보면 건설산업과 관련해 전 분야에 걸쳐 IT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프로젝트가 중시되고 있으며, 건설 프로젝트의 외형적 확대보다는 내실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규 사업은 국토 개발, 안전 및 방재,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전통적 토건 사업에서 융·복합 사업, 국내에서 해외, 시공에서 엔지니어링 및 건설 관리 등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또한, 계약 제도에서는 적정 가격의 확보 및 중소·약자 중심의 거래 관계 개선이 중요한 방향이다.

2. 건설 경영 동향

◆ 빅데이터, 데이터는 답을 알고 있다

- 건설업계, 데이터 낭비자에서 전략적 데이터 관리자로 탈바꿈해야 -

건설동향브리핑 제402호(2013.3.11) 강상혁 연구위원

■ 데이터 홍수의 시대, Tera(1조)도 데이터의 양을 표현하기에는 역부족

1990년대 디지털 시대의 도래 이후 데이터 축적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2011년 인류가 생성한 데이터는 1조 9,000억 기가바이트(Gigabyte)를 넘어섰고, 2020년에는 35조 기가바이트에 이를 전망이다. 구글의 전 CEO 에릭 슈미트는 문명이 시작되면서부터 2003년까지 인류가 생성한 데이터가 5엑사바이트(Exabyte) 수준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이제 그 정도 양의 데이터는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생성되는 시대가 되었다.

2011년 기준으로 매 초 전송되는 이메일은 290만 건, 하루 발생하는 트윗의 양은 5,000만건, 구글이 매일 처리하는 데이터의 양은 240억 메가바이트(Megabyte)에 이른다. 빅데이터란 기존의 데이터 베이스 관리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데이터 분석 기술을 의미한다. 빅데이터는 기존의 방식으로로는 관리와 분석이 매우 어려운 데이터 집합, 이를 관리 및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조직 및 관련 기술까지 포괄하는 용어이다.

■ 건설업계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MGI의 연구에 따르면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미국의 의료 서비스 부문에서 연간 3,000억 달러의 편익과 생산성 0.7%의 증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의 공공 행정 부문에서 매년 2,500억 유로의 편익과 생산성 0.5%의 증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 소매 사업 부문의 이익은 60% 증대될 수 있고, 제조업도 제품 배치와 조립 비용의 최대 50%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데이터의 중요성과 잠재 가치가 미래로 갈수록 증대될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하며, 빅데이터의 활용 역량 수준을 단계적으로 제고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데이터의 축적조차 체계적이지 못한 건설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빅데이터는 요원한 '환상의 기술'로 비쳐질 수도 있

다. 하지만, 빅데이터는 미래의 경쟁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한 핵심 자산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빅데이터 시대의 강자로 부상한 아마존의 창업주 제프 베조스가 말한 “우리는 절대로 데이터를 내다버리지 않는다”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 안전 시스템’ 구축 필요

- 건설 근로자의 이동성과 생생·소멸을 반복하는 다수의 소규모 현장 특성 고려 -

건설동향브리핑 제403호(2013.3.18) 심규범 연구위원

■ 증가하는 건설업 재해에 대해 새로운 접근 방식 필요

증가하는 건설 현장 재해 문제의 근본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현행 접근 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모색해야 한다. 실제로 2005년과 2011년 기간 중 건설업 취업자 수 구성비는 감소(7.9% ⇒ 7.2%)하였으나, 재해자 수 및 사망자 수 구성비는 모두 증가(18.6% ⇒ 24.4%, 24.4% ⇒ 29.4%)하였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 재해가 감소하지 않는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는 기존의 건설 안전 정책이 현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수의 일시적 사업장 및 이동이 잦은 근로자에 대한 현장 단위 접근의 한계가 있다. 건설 재해자 수의 74.1%와 사망자 수의 52.7%가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 집중되어 있으나, 연중 사업장 수는 약 68만 개에 달해 현장 단위의 접근만으로는 역부족하다. 특히, 소규모 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기초 안전 요소의 공급이 미흡한데, ‘복장, 보호 장비의 부적절한 사용’에 의한 사망자 중 30인 미만 규모에서의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3.1%를 차지하고 있다.

시공 이전 단계에서의 산업 안전 요소를 미반영한 것도 문제다. 건설업의 업무상 사고 사망자 중 53.0%가 추락에 의해 발생하고, 그 중 비계 등 가설구조물에서의 추락이 35.8%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것에 대한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의 고려는 미흡한 수준이다. 하수급자에 대한 산업 안전 역할 분담도 미흡하다. 하수급자는 직접 고용자이자 작업 관리자이므로 가장 가까이에서 산재를 예방할 수 있으나, 현행 규정상 산업 안전 관련 책임은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산업 안전에 소홀한 것이다.

■ 건설 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건설 안전 시스템’ 구축 필요

건설 안전 시스템이란 근로자의 이동성과 다수 소규모 현장의 잦은 개폐 등 건설산업의 특성이 반영되어 건설 재해의 예방에 효과적인 산재 예방 시스템을 말한다. 기초 안전 요소에 대한 건설산업 차원의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모든 건설 현장에 공통적 요소인 기초 안전 요소에 대해 근로자의 이동성을 고려하여 산업 차원의 건설 안전 기금을 조성하고 근로자에게 직접 공급해 ‘중복과 누락’ 해소하는 방안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계획 및 설계 단계의 산업 안전 요소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시공 이전 단계부터 안전에 대한 발주자의 역할을 강화해 계획 및 설계 단계에 안전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가설 공사에 대한 설계도 작성을 의무화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하수급자에 대한 산업 안전 역할의 강화를 목적으로 직접 고용 주체인 하수급자에 대한 환산 재해를 관리 및 공표 제도를 시행한다면, 하수급자의 산업 안전 역량 강화와 건설 현장의 산업 안전 효과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012년 건설업 경영 성과 분석²⁾

- 성장성·수익성·안정성 모두 최악, 입·낙찰 제도 등 구조적 문제 해결 시급 -

건설동향브리핑 제410호(2013.5.6.) 최은정 책임연구원

■ 성장성 : 총자산증가율, 유형자산증가율 및 매출액증가율 감소로 하락

2012년 건설업의 성장성을 살펴보면, 총자산증가율은 -3.7%로 전년 대비 8.3%p 하락, 유형자산증가율 또한 2011년 4.0%에서 2012년에는 -2.1%로 6.1%p 하락하였다. 매출액증가율의 경우, 제조업이 2011년 15.8%에서 2012년에 4.0%로 11.8%p 하락한 것에 비해 건설업은 2011년 3.8%에서 2012년에는 3.6%로 소폭 감소하였다.

■ 수익성 : 2011년보다 더 악화, 전 산업에서 가장 낮아
건설업의 수익성을 살펴보면,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11년 1.8%에서 2012년에는 0.2%로 전년 대비 1.6%p 하락, 매출

2) 본고는 한국은행이 2013년 4월에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속보)」의 내용 중 건설업과 관련된 데이터를 정리해 기술하였음.

액세전순이익률도 2011년 -0.8%에서 2012년에는 -4.0%로 감소함으로써 적자가 더 심화되었다. 자기자본순이익률 역시 2011년 -0.7%에서 2012년에는 -11.9%로 급감하였으며, 이자보상비율은 매출액영업이익률의 감소로 2011년 81%에서 2012년에는 10.9%로 큰 폭 감소으로 해 건설업의 수익성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 **안정성 :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 개선으로 보기 어려워**

2012년 건설업의 자기자본비율은 33.0%로 전년 대비 0.2%p 상승한 반면, 부채 비율은 203.5%로 전년 대비 1.3%p 감소함. 부채 비율의 감소로 인해 차입금의존도 또한 2011년 26.6%에서 2012년에는 26.3%로 다소 감소하였다. 그러나 건설업의 유동 비율은 2011년 145.0%에서 2012년 138.4%로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안정성이 개선되었다고는 보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제조업, 서비스업 등 대부분 업종의 현금흐름보상비율이 전년 대비 상승하였지만, 건설업의 경우 영업 활동의 현금 흐름과 재무 활동의 현금 흐름이 악화됨으로써 대폭 감소하였다.

■ **건설 경기 불황 지속시 건설업체들의 생존 더욱 위협, 구조적 문제 정상화 시급**

건설업의 불황이 지속될 경우 그동안 유지되었던 저성장마저도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되면서 건설업체들의 생존이 더욱 위협받을 수 있다. 정부는 건설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합리적인 입·낙찰 제도의 운영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